

북미 진출 전략

- 미국 객 3 주 2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가. 시장 전망

경제 연착륙(2%대 경제 성장률)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시작 → 확장세는 둔화 But 침체 없는 경기 성장 전망

- 25년 실질성장률: 2.2%(미국), 2.4%(캐나다) 전망
 - 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긴축정책에 따른 침체 우려 But 강력한 성장세 이어왔으나, 누적된 통화 긴축 효과로 24년 하반기부터 성장세 둔화 예상
- 24년 9월 FED가 금리 인하 시작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어온 통화 긴축 정책 종료(금리 인하 종료 = 긴축 종료)
 - 이에 따라 목표한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도달할 가능성 상승
 - 겨에 개입 빼고 시장의 힘으로 돌아갈 때 연착륙을 할 것으로 예상중(= 현재 경기 좋다는 평가)

시장의 관심은 빅컷(0.5% 금리 인하)으로 인한 미국 경제 '연착륙' 유도 가능 여부 → 정부 개입 없이 가능한지 여부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24.10)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 시 올해 0.25%씩 두차례 총 50bp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시사)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

지표	연착륙	경기 둔화 우려	경착륙
경제성장률	2%대 유지	1% 내외 유지	0%대 성장
물가상승률	2.50%	2.00%	1.50%
실업률	4.2~4.4%	4.5~5.0%	5.0% 이상

- IMF도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7%에서 지난 22일 1.8%로 내림
 -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경기 침체 가능성 25% → 37% 증가)
 - 경제성장률 = 경기둔화화
- 물가상승률: 3% 전망
- 3월 실업률: 4.2% = 연착륙
- 22년 물가(7.9%) 잡으려고 금리 상승 → 23년 물가(4.2%) → 24년 하반기(3.1%)에 금리 하락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트럼프 정부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변화

- 트럼프(공화당) 당선

- **블루월 3개주**(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선벨트 4개주**(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 선벨트: 퇴직한 부자들이 자주 가는 남쪽 지역(공화당)

※ 블루월: 러스트벨트(옛 중공업 공업지대; 노조로 인한 민주당 텃밭)지역에서 분리된 것으로 민주당 우위

※ 선벨트: 미국 남부지역으로 공화당 우세주가 많음

- 119대 연방 의회 선거에서 **상, 하원 모두 다수당 확보**
 - **상원 100석**(50개 주 두 명씩):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는 의석 60석 확보 실패
 - 하원: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 1석 공석
- 주지사(4년마다 대선과 같은 해에 투표; 50명): 공화당 27명, 민주당 23명

투표 특징

- 인종: 라티노(히스패닉인), 아시아인이 트럼프쪽으로 많은 투표
- 성별: 백인 남성이 특히 많이 지지
- 학력: 학력이 높을 수록 해리스 지지하는 경향

트럼프, 한층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 전망

- 트럼프 관세전략: **상호관세, 보편관세**
-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 해소를****최우선 경제 과제 중 하나로 설정
 - 전 세계 수입에 보편(무차별) 기본 관세 10 ~ 20% 부과
 - 대중 수입에 대상 관세율을 60%로 인상 공약
- **상호무역법** 입법을 추진
 - 상호무역법: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

트럼프 1기 행정부 추진 관세 정책

- + 무역법301조(슈퍼 301조 관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 무역법232조(무역확장법 232조): ****안보****
- + 세이프가드 관세: 합법으로 타당하다면 WTO 제소해도 소용 없는 임시 조치

트럼프 1기 행정부 추진 관세 정책

-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조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이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의 안보를 명목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 **다른 수입제한조치에 비해 제한 범위가 넓고 특정 기한 없음**
- **세이프가드**: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 수입 임시 제한 or 관세 인상을 통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GATT조항(제 19조)****에도 규정된 **임시조치**

트럼프 집권 시 환율 문제가 중요한 통상 이슈로 부상 예상

-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무역적자 원인: 달러 고평가
 - IF 저평가 → 수출 유리, 수입 불리
- 약달러를 통한 미국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수단 활용 예상
 -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
 - 정부 외환시장 개입 → 달러 인덱스 하락
 - 외국 정부 상대로 통화 가치 절차 압박
-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지만, 환율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기축통화 발행 비용의 일정한 분담을 원함

반도체 수출입 규제 강화와 범위확대 예상

- 트럼프는 첨단 노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 수출 통제를 포함한 규제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일부 범용기술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Legacy: 자동차, 항공기, 가전 등에 쓰이는 다양한 기술(현재 반도체 시장의 70%, 중국 29% 시장 점유율)
-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강화, 국가안보 목적 관세 부과, 중국의 상계 관세 부과, 미국의 대중 반도체 투자 규제, 중국산 조달 금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임
- 경제회복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추구 전망
 - 대규모 감세, 세금 공제 확대, 규제 완화로 소비와 경제 성장 촉진
 - 25년 만료 예정인 17년 트럼프 세제개혁법(**TCJA: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 연장 및 보완 추진
- 감세 공약 요약

기존	【2017 트럼프 세제개혁법(TCJA, Tax Cuts and Jobs Act)】(*25.2. 일몰 예정)	
* 일몰	법인세(35→21%) 인하, 소득세 구간 축소(7→3단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5→37%)	
폐지 추진	•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증가(500만 달러→1,360만 달러) • 20% 예상	
신규	법인세	제조업(미국 내 생산·미국인 고용) 기업 대상 최고세율 15%로 인하 <=> 해리스 법인세율 28%
	급여세	팀·초과 근무 수당 대상 폐지 팀에 대한 세금 면제

- **Buy American**(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수요 증대
 -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에 있어(모든 물품 X) 미국산 우선 구매가 가능하므로 미국 기업은 정부 조달 입찰에서 외국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음

미국 내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자립 촉진 예상

-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 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생산 장려, 연방 토지 내 석유/가스 시추 허가 등
- **기존 친환경 정책 철회**: 그린 뉴딜, 전기차 의무화 및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 **미국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 확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ESG 정책 중단

- ① 화석연료 관련: 연방 공유지에서의 시추 허용, 알래스카 북극 보호지역에서 시추 재개, 인프라(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등) 확대, **수입파쇄법(일명 프랙킹(fracking))**. 셰일오일 생산 핵심 기법으로 환경단체들은 토양오염을 유발한다며 반대) 지지, 석탄산업규제 폐지 등
- ②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의 보조금 철회. 특히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상 풍력발전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동
- ③ 기후협약 · 환경 규제 관련: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불참, 관련 예산 삭감 및 인원 감축(ex. 환경보호청, 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등), 차량 및 가전기구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IRA 무력화** 등
- ④ 전기 · 전력 관련: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투자 확대, 발전소 건설 신속 승인** 등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 KCIF 국제금융센터 - 핫이슈

양자 무역 협상 선호 및 다자 무역협정 재검토 전망

- IPEF(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TTC(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USMCA 등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 및 국가 간 무역협정 재협상 시사
- PNTR(항구적정상무역관계) = GAT 1조 최혜국 대우(MFN)**

정책요소	바이든	트럼프
미중관계	디리스크, 대중국 전략 품목 301조 관세 부과	디커플링, 중국의 PNTR 지위 철회
무역통상	다자간 무역협상	양자 간 무역협상
공급망	프렌드/니어쇼어링	리쇼어링 및 온쇼어링 강화
기후변화	IRA, 기후변화 대응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제조업	Buy American 정책 유지	IRA 기후 관련 지원금 축소, CHIPS법 보조금 축소, 폐지

나. 북미 AI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전략

25년 글로벌 AI 시장은 전년 대비 18.7% 상승한 7,576억 달러 규모 전망







- 글로벌 AI 지수상 AI 경쟁력(83개국 기준): 미국 꾸준히 1위, 캐나다 8위, 한국 6위
- AI 산업 육성을 위한 북미 양국의 정책 지원
- 바이든 정부는 국가 AI 연구기관(**NAIRR**)설립
- 23년 미국 정부는 AI 위험성을 지적하는 행정명령 공표, 진흥 규정은 법률로 지정하고 규제는 행정명령으로 운용하는 전략을 통해 AI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는 정책 중
- 바이든(규제) < 트럼프(진흥)

AI 기술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미 제조업 부흥 견인

-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도입
- 첨단 제조 분야에 미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막대한 자본력이 동 시장 성장동력으로 분석
- 사례

종류	사례
물류 자동화: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문 이행 비용 감축	 Amazon 현재 75만 대 이상의 이동식 로봇을 전 세계 물류창고에서 활용 중이며, 매년 <u>물류센터를 통해 처리되는 약 50억 건의 주문 중 75%가 로봇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u>
	 Walmart 2026년까지 미국 전역에 AI, ML, 로봇틱스 등 차세대 기술을 접합시킨 5곳의 차세대 풀필먼트 센터(Next Generation Fulfillment Center) 개점 계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차세대 물류센터와 기존 물류센터, 매장을 통해 <u>미국 인구 95%에 익일 또는 2일 배송을, 80%에 당일 배송을 실현한다는 계획 보유</u>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4년)

종류	사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제조 공정 전 단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해 사전 제조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공정 모델을 도출, 생산 최적화 및 품질 강화를 실현	 Eli Lilly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쥘바운드(Zepbound)를 출시한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공정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 이를 통해 일라이 측은 추후 공정 중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설비 중단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조 과정을 최적화해 불량률을 줄이고 일관된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 운영 관리 방식으로, 종전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로 이원된 제조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되는 것을 의미	 Johnson & Johnson 2018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Azure)를 활용해 공급망 관리에서부터 제조, 포장, 출고 등 <u>전 단계</u> 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 및 분석해 발생 가능한 품질 오류 빈도를 상당 부분 낮추고 있음
머신비전: 머신비전 기술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이라고도 불리며,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눈과 뇌와 같이 이미지 처리, 패턴 인식 등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의미	제약·바이오 업계 머신비전 기술은 포장·라벨·캡·유리병 등에 대한 인간의 육안 검사 대체에서부터 다른 산업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감지, 의약품 분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폭넓게 활용
재고 관리: AI 기반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 및 재고 관리. 드론이 넓은 창고를 신속하게 이동하며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드론은 창고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안전 점검에도 활용돼 직원들이 높은 곳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필요를 줄여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음	 Amazon 물류창고에 드론을 채택해 재고 관리 효율성을 23% 개선하고 운영을 간소화하면서 업계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
	 Walmart <u>드론을 통해 재고 조사 시간을 기존의 한 달에서 단 하루로 단축</u>
	 Barrett Distribution Centers 수작업 검사로 시간당 20개의 재고 위치만 처리 가능했던 일을 드론을 활용해 수행한 결과, 시간당 350개까지 처리 가능
	 DSV 파일럿 연구 수행 결과, 자율 비행 드론을 사용해 데이터 수집 시간을 50% 절감할 수 있었으며, 기술이 완전히 도입되면 그 절감 효과는 8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 결과 공개

미국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전력 수요 증가 대응 본격화

첨단 기술 도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 So,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
- 디지털화, AI 기술 채택에 따른 데이터 센터 설립이 늘면서 필요 전력량도 동반 상승
 - 현재같은 속도로 데이터 센터 증가 시 운영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 2030년말까지 현 전력 소비량의 2.5배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미 10대 전력 기업 가운데 9개가 **최근 전력 수요 급증 요인으로 데이터 센터를 꼽음**
- 일부 지역: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사용 급증 대응을 위해 화력 발전소 폐쇄 지연, 전력 확보 가능 지역 중심으로 토지 가격 상승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하는 ESS 시장

- 재생에너지 전환과 첨단 기술도입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ESS 수요 및 설치가 큰 폭으로 증가
- 신규 전력 생산에서 ESS를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 배터리 가격하락 → ESS 경제성이 개선
- IRA를 통한 세제 혜택 등이 ESS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분석
-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니조나 등 일조량이 풍부한 미 서부와 남부 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ESS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

탄소 중립 노력에 관심 높아지는 원자력 발전 사업

- 건설에 시간 소요가 크지만 안전을 가정하면 아주 높은 효율성
- 최근 전기화 트렌드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 기조 강화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재조명
-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배치 가속화 추진 예정
- **캐나다 정부 SMR 도입 적극 추진**
- 한국: SMR 기술 분야에서 높은 평가, 23년 중순 SMART를 포함한 SMR 관련 협약 체결(한-캐)

마. 북미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속 수출 전망

미, 캐나다는 공통의 가치와 깊은 인적 연결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미국), 23년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7.4%****가 미국으로 향함
- 캐나다 원유 97% 미국으로 수출, 미국의 캐나다 무역의존도(25%)
- 공급망 재건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 축소
 - 북미 국가들은 GVC에서 RVC, 리쇼어링 등으로 공급망 구조 지역화를 적극 추진
 - 북미 동맹 강화, 경제/정치/안보적 이유로 대중국 경제 의존도 줄이려는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작용

안보 개념 확장을 기반으로 한 미국 공급망 재편 전략

- 국가 안보 위협 요소: 전쟁/테러 → 감염병, 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 다양화
- 국가 안보 개념과 무역/통상을 연계해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중
- 미국의 대중 견제가 구체화되고 포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한 대중 견제 관련 법안 추진 중**
- **캐나다 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 강화, 동맹국 공급망 참여 노력 확대**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6%이던 수입 관세에 100% 추가 관세 부과할 계획을 발표

바. 바이퍼 케이션, 초고가 아니면 초저가인 평균 실종 사회

- 소비 양극화: 질적으로 다른 두 갈래로 전환되는 현상
- **중산층 감소, 저소득&고소득층 증가**
 - 저소득층: 4%p 증가
 - 고소득층: 7%p 증가
- **고물가, 고금리지속 → 소득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산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 고소득층: 고물가에도 명품과 고가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소비
 - 상위 20% 고소득층: 해외 여행, 엔터테인먼트, 기타 서비스의 지속적 지출
- 경제적 여유 있는 소비자: 여행(1순위) 등 서비스 소비 + 호화로운 여행 선호
 - 여행객이 덜 붐비는 비수기 여행 + 고급 여행 패키지 선호
- **요노족(You Only Need One)** 등장
- 식품, 에너지,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저소득층에게 부담
- 팬데믹 동안의 저축을 모두 소진, 월급에 의존해 생활,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 자동차와 기타 대출 연체가 증가 추세

양극단을 겨냥한 분리 마케팅(프리미엄화와 초저가 마케팅) 추진

- 카드사 프리미엄 고객에게는 회원비를 면제해주는 제휴 서비스로 고소득층 고객을 유입시켜 소비 자극
 - 유기농 신선상품, 하이엔드 브랜드 입점
- 식품, 생필품군에서도 초고가, 초저가 제품을 동시에 판매 중인 추세
- 패스트푸드 초저가 메뉴와 초고가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동시에 트렌드로 언급되며 **외식 문화도 양극화 현상 반영**

4. 비즈니스 환경 분석

정치환경: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판도 변화

-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 정책 회귀 및 대내외 정책 변화
- 감세, 보편 관세 부과, 국경 보안 강화, 범죄 및 이민 정책 개혁
- 대중 정책에 강경한 입장, 경제/안보 전반의 중국 견제 강화 추구 등
-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립을 통한 자국 산업 활성화 전망
 - 기업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 → 경제 회복 가속화, 물가 억제, 금리 정상화 추구
 - **디커플링 강화**: 대중국 무역, 투자 제재 확대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 반도체,에너지, 희소금속 등 전략적 핵심 분야에서 자국 생산 확대

캐나다 트뤼도 총리(자유당)집권 9년차, 흔들리는 지지율

- 중국의 연방 총선 개입 의혹, 트럭 운전자 시위 중 대피, 공금 횡령 등으로 지지도 하락
-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포일리에브르: 과도한 정부 부채와 부동산 버블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현재 총리: 마크 카니(자유당)**

- 환경 정책, 난민 수용과 소수 민족 포용과 같은 이민 정책 등 업적은 호평
- 시크교 독립운동가 피살 관련 인도와잉 외교 갈등

라. 정책, 규제 환경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확대
 -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무역 불균형 해소, 자국 제조업 강화 및 산업 육성 추진
 - 리쇼어링, 니어쇼어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양자간 무역 협상 우선,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 및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시사
- 26년 USMCA 6년 재검토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멕시코 우회 수입 방지 조치 반영, 에너지, 기술, 통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재협상 및 규제 강화 포함 전망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 강화 기조 지속

-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구축을 목표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보조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반도체 법 보조금 유지**)
-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접적 연결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추진
-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국내 공급망 현황과 취약점 분석을 바탕으로 공급망 확보 추진 중(상호관세에서 제외)
 - 필수 의약품의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해 급진적 통화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행정명령 발동**가능성
주시 필요
- **행정명령**: 강력한 정책도구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령하는 지시로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대중 규제 기조 속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무역, 투자 제재 강화

- 중국산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의 수입 4년 내 단계적 중단 추진
-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 관계(PNTR; 최혜국대우)**지위 철회로 고관세 부과

중국 진출전략

- 중국: 객 2 주 2

키워드

- 가격 경쟁력(공급과잉)
- 이가환량: 수출량 증가, 수출액 감소하는 현상
 - 소비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을 낮춰 판매량 증대 시키는 마케팅 전략
- 신싼양: 의료, 가전, 가구 등 라오싼양을 대체하는 3대 신 수출 품목(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 신질생산력: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 고효율 기술과 제품을 만든다: 혁신과 고품질을 강조하는 제조강국을 지향함(ex: 딥시크)
 - 2024년 중국언론이 가장 많이 쓴 단어(고효율, 첨단기술, 고수준)
- 이구환신: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소비의 핵심 키워드: 보조금으로 생각)

시장 전망

- 경제: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24년 5% 내외, 25년 4 ~ 4.5% 성장률 전망
- 4.1%(KIEP)로 전망 25.5.14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5%로 설정
- 중국 경기 하방을 방어해온 정부 주도의 인프라, 제조업 투자와 수출이 ****역기저효과****로 성장세 둔화, 중국 경제 감속 예상
- **역기저효과**: 비교대상이 되는 시점의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 상대적으로 감소율이 높아보이는 현상
- 소비, 투자 심리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 내수 회복 ****모멘텀(추진력, 성장동력)****악화
- 정부 주도 첨단, 신흥 분야 투자와 신흥 소비가 25년 중국경제 핵심 성장동력
 - **2030탄소피크 2060탄소중립**
 - 신인프라, 신제조업 투자, 탄소중립, 첨단화에 의한 신소비 수요 확대
 - 기존 소비는 이미 포화 상태 → **새로운 소비 창출 필요**
 - 소비 회복세 미진, 부동산 경기 침체, 민간 투자심리 악화, 미-중 경쟁 장기화 및 미-EU 견제 심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불확실성 상존
- **신인프라**: 20년 신인프라가 처음으로 정부 업무 보고에 등장, 관련 분야에 동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5G 기지국 건설, 특고압, 도시간 고속철도 및 도시궤도 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충전스탠드, 빅데이터 센터, AI, 산업 인터넷 등 7개 분야 포함)
- **신제조업**: 제조업 + 서비스업, 마윈의 알리바바는 신제조업은 인터넷, 데이터, AI, 클라우드, IoT 등을 제조 프로세스에 통합해 전통적 제조업을 바꾸는 것

주요 경제 지표

- 성장률: 5.2, 5.1, 4.5 (23 ~ 25)
- 실업률: 5.6, 5.2, 5.1, 5.1 (22 ~ 25)
- 물가상승률: 0.2, 0.6, 1.0 (23 ~ 25) **디플레이션**, debt/부동산 영향으로 경기침체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GVC 및 통상 질서 재편 가속

중국 견제 심화 및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 통상환경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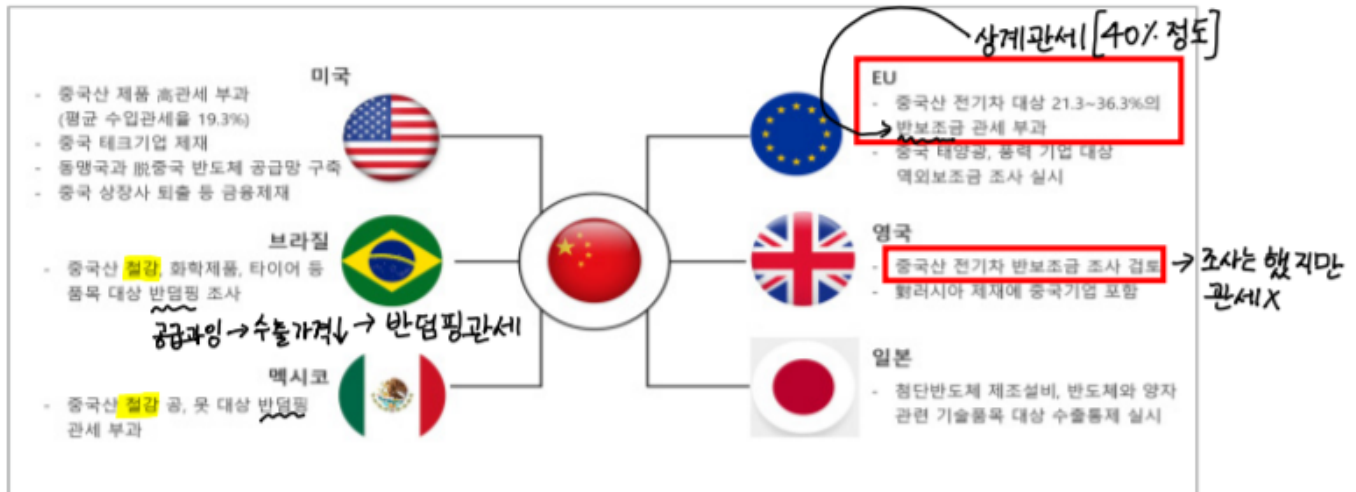
- 미 트럼프 재당선 및 **레드웨이브**(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실현으로 미-중 관계 불확실성 확대
- 더욱 강력한 대중 견제 조치 예고: PNTR(최혜국 대우) 박탈
- 대중 견제에 따른 영향
 - 중국 수출 감소
 - 중국 경제 성장동력 악화
 - 우회수출 차단에 따른 산업망, 공급망 불안정 등 악영향 전망
 - 평균 수입 관세율: 약 40% 도달 예상(25.5.14: 90일간 30%)
- **고립주의**: 국제분쟁에서 중립 위치를 유지하고 정치/군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한다는 정책, 개입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른 나라 일에 개입하지 않고 동맹관계도 체결하지 않는 미국의 전통적 외교 정책
- **우회수출**: 특정 상품 규제, 관세 회피를 위해 제 3국으로 해당 상품, 부품, 요소를 수출해 가공 후 원산지 변경을 통해 제재 시행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트럼프는 관세를 매김(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등)
- 고관세는 중국의 대미 수출경쟁력 악화, 나아가 전체 수출 둔화를 심화시킬 전망
- 현재 중국은 공급 과잉 → 싼 가격에 많이 파는 중
- 수출의 경제 성장 견인력 약화는 중국 경기 회복 흐름에 부정적 영향
 - 대미 수출 전년 대비 90% 감소, 중국 전체 수출 약 13% 감소

- 중국기업 해외 생산라인을 활용한 우회수출 영향을 더한 경우 중국 전체 수출 약 8% 감소, 중국 경제 성장률 1 ~ 1.3%p 감속 전망

중요: 미중 경쟁 격화, 고관세 회피를 위한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중국 제품 대상 반덤핑 조사 등 주요국 대중 견제 참여 확대

〈주요국의 중국 견제 현황〉



자료: 중국 언론 및 증권기관 보고서 종합(2024.8월)

- 지정학적 충돌 악화 및 장기화는 글로벌 공급망,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해상 물류 등에 악영향
- 일대일로 연선국, 신흥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및 통상 질서 구축에 속력

선진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낮추면서 일대일로 연선국(60개국), 아세안, 브릭스 등 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 중국이 미국의 관세에도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이유

- + 18년 미-중 무역 경쟁 발발 이후 미국은 중국의 2위 교역 파트너로 밀려남(1위: 아세안), 1위와의 비중 격차도 지속 확대
- +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RCEP) 등 다자체계를 활용해 일대일로 연선국 및 동남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 중국 중심 산업망 강화 전망

- RCEP: 아세안 + 6개국 - 인도 = 15개국, 중국 중심 공급망
- 파나마 운하: 일대일로 협정을 통해 운하 주변 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게 됨. But 파나마는 미 해군 함정의 운하 무상 통과 보장, 일대일로 탈퇴 밝힘(25.2.7)
- 아시아-아프리카-남미 등 신흥국 중심 경제 우군 확보하여 주요국의 대중 압박 대응
 - 일대일로, 중국-아프리카 포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등 **다자체계** 아래 신흥국과의 경험을 강화
 - 상대국이 감당할 수 있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작고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중심의 국제 물류 채널 구축 &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관련 품목 수출 확대
- **상하이협력기구**: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이 1996.4.26일 결성한 **상하이파이브**가 전신이며, 거기에 우즈베키스탄(2001년) 가입하면서 명칭 변경하여 생겨난 국제기구

주요 원자재, 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수출 통제 강화를 통해 신공급망 모색

- 자원 무기화 대비 및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 중국이 공급 주도권을 진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주요국의 대중 제재 조치에 **맞대응** 가능성 심화
 - 희토류, 텅스텐, 마그네슘 등 품목의 세계 대중 의존도는 80% 상회
- 중국기업의 **추하이(해외진출)** 증가로 관련 산업망이 해외로 연장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중국 중심의 공급망 생태계 구축 촉진

성장 모멘텀 확보 및 채산성 방어를 위한 저가 수출 지속 예상

중국 경제 감속 및 소비 회복세 미진으로 경제성장률의 수출 의존도 심화

- 소비, 생산의 저조한 회복 흐름 속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도 한계
-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 수출 호황은 세계시장 수요보다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
- **이가환량**: 소비위축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 수출 증가, 수출액 감소하는 현상

구조조정, 기업의 채산성 악화 방어를 위한 (공급과잉으로 인한) 저가 수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중국 공급 과잉 및 구조조정, 중국 내수시장 경쟁 격화에 의한 저가 수출 공세가 이어질 전망
- 철강은 대표적 공급 과잉 및 산업 구조조정 품목
- 자동차의 경우 중국 내수시장 포화에 의한 경쟁 격화로 수출 가격을 낮춰서라도 수출량을 확보하는 모양새
- **신싼양**: 기존 수출을 주도하던 라오싼양을 대체하는 3대 신수출 품목(**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 단, 대중 고관세 및 중 기업 마진을 압박 등의 요인으로 장기화 여부는 관망 필요

다. 신질 생산력으로 두 마리 토끼(경기부양, 산업 고도화) 잡기

새로운 질적 생산력 강화 → 내수 확대 및 경제 체질 개선 촉진

- **신질생산력**: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 고효율** 기술과 제품을 만든다: **혁신과 고품질**을 강조하는 제조강국을 지향(ex: 덩시크)
 - 3대 특징: **첨단기술, 고효율, 고수준**
- 첨단기술 중심의 첨단화, 녹색화, 스마트화 성장으로 전환하고 총요소생산성을 올려 '혁신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의미
- 신질생산력 발전은 **신기술, 신산업 육성, 전통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가 핵심 과제
 - 거국 체제 구축을 통해 전략 과학 기술 역량 강화 및 국가혁신체계 효율 제고
 - 미래 산업체계 구축 및 전통 산업 업그레이드 촉진 예상

정부 주도 첨단 기술, 제조업 투자를 확대하여 첨단, 핵심 기술 역량 강화 예상

- 정부의 관련 지원책 강화로 민간 부문의 제조업 투자 호황은 지속될 전망
- **이구환신**: 노후 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
 - 정부가 보조금으로 이구환신을 유도 → 제조업 투자 확산

라. (소비)완만한 개선 흐름 속 '불균형적 회복' 심화

경기둔화,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의한 자산 감소 효과로 소비 회복 부진

- 중국 경제 감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 소비 둔화세 심화**
- 리오프닝 이후 소비 회복세를 이끌어온 외식 부문마저 **기저효과 종료로 둔화 추세**
- 내수 부진, 시장 경쟁 격화의 영향으로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효과가 희석되는 양상

신수요, 신제품, 신브랜드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구조조정 가속화

- 브랜드: **vivo, 화웨이** 등 성장세가 두드러짐
- 문화: 콘서트 관객수, 공연 수입은 각각 333%, 493% 급증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중요)정치 환경

시진핑 집권 3기 중국식 현대화 추진 및 1인 지배 체제 강화

- **당강정약**: 당을 강하게 하고 정부를 약하게 하는 시진핑 주석 1인 체제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 주석 연임을 위해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함으로 장기적 발전 목표 실현 제시 ex) 공동 부유
- 반부패 기조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
 - 기존 당, 정 분리 원칙을 깨고 **당 우선 정책을 가속**
- ****내수위주의 쌍순환****과 ****공동부유****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 **쌍순환**: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큰 두축으로 해서 선순환을 만드는 것으로 수출에만 포커스 → 내수에도 포커스를 맞춤
- 시진핑 1기 키워드 **중국제조2025**
- 시진핑 2기 키워드 **내수위주의 쌍순환**
- 시진핑 3기 키워드 **중국식 현대화**

대국 외교 추진 가속화

-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중점
- 아프리카, 동아시아, 인-태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
- 대미: 미-중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외교 정책(주도권을 갖고 있는 분야와 신흥국 중심 우군 확보를 통한 압박 대응)
- **다자외교**: 일대일로 연선국 및 WTO, UN, BRICS 등 다자 국제기구에서의 역할을 지속 강화할 것으로 전망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및 집권체제 강화(당강정약)

- 전면 개혁 한층 심화, 중국식 현대화
- ****중국 국무원 조직법****개정, 시진핑 '1인 체제' 공고화 및 총리 위상(현: 리창) 약화
- **총리 책임제**를 무력화한셈

나. 경제 환경

중국 경제성장률 4.0 ~ 4.5% 달성 예상

- 24 경제성장률 5% 달성(4분기 엄청난 경기부양책에 5.4% 성장)
- 내수 부족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경기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중국 경제는 **불균형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대외적인 대중 견제, 중국 부동산 위기, 소비 둔화, 구조조정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둔화, 민간 투자 부진 속 제조업, 인프라 투자 확대, 수출 호황 등이 경기 둔화를 방어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생산: **탄소중립, 신흥전략**산업 관련 품목이 성장세를 보이며 생산 성장세 견인
- 소비: **이구환신** 정책 등 다양한 소비 진작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세 불균형 심화
- 투자: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중,+ 제조업, 인프라 투자가 전체 둔화세 방어
- 교역: 24년 1 ~ 3분기 모두 플러스 전환, **무역 흑자 기록**

경기 부양 및 유동성 공급을 위해 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 강화

- 금리: 유동성 공급을 위해 대출 금리, 예금 금리 인하
- 유동성: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 견지
 -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인하, 채권발행 확대, 부동산 임대 금융 지원 강화 등
- 환율: 안정적인 위안화 환율 유지 + 국제화 추진 가속화
 - 글로벌 결제 통화 중 4.69%(11개월 연속 세계 4위 결제 통화)

〈중국의 최대 교역국 주요 현황〉

(단위: 억 위안, %)

국가	변동추이(2019년~2023년, 2024년 상반기)	특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상반기 미·중 교역액은 2조 2,92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 '23년 미·중 교역액은 4조 6,72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6% 하락 - 對미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전자, 음향 장비 부품이 총수출액의 42.5%, 완구·가구 등이 12.1% 차지 - 對미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연료·광물유 및 증류물이 총수입액의 13.4%, 곡물, 채유, 종자, 공업 및 의약용 식물 등이 10.8%, 전기·전자 및 음향장비·부품이 8.5% 차지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상반기 對韓 교역액은 1조 1,26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 ○ '23년 한·중 교역액은 2조 1,84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7% 하락 - 對韓 주요 수출 품목은 전자 음향 설비 및 부품, 무기화학품이 총 수출액의 39.2%, 철강과 그 제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이 14.6% - 對韓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기계 및 장비와 부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유기화학물 등이 총수입액의 66.5%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상반기 對일 교역액은 1조 55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하락 ○ '23년 중·일 교역액은 2조 2,38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7% 하락 - '23년 對일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기계제품, 방직품 및 원단 등이 총 수출액의 29.2% - '23년 對일 주요 수입 품목은 전기기계 및 장비부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광학기기, 플라스틱과 그 제품 등이 총수입액의 40.7%

자료: 중국 해관총서, KITA,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2024년 8월)

다. 산업 환경

-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빠르게 전환(3차 산업인 서비스업 55.9%)
- '중국제조2025' 골기로 제조업 기술혁신과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과 첨단기술분야에서의 시장입지 확대중
- **3신경제**: 중국 국내총생산액에서의 3신 경제 부가가치 비중은 지속확대
- 23년 중국 3신(**신산업, 신업태, 신비즈니스모델**)경제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6.4% 증가
- 3신 경제 부가가치 비중은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신산업체계**: 내수확대 및 자립형 공급망 구축 속 **신질생산력**추진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도모하는 신질생산력 실현을 위해 신산업 체계 구축 박차
- **혁신, 친환경**: 정부의 **이구환신 정책**추진 및 **탄소중립** 기조로 기술 혁신과 친환경 산어비 발전이 산업 주요 트렌드로 부상

라. 정책, 규제 환경

- **이구환신:** 내수 확대, 침체된 소비,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 **신소비진작책:** 소비 회복을 위해 신소비환경조성, 신소비성장동력 육성에 대한 조치 발표
 - 외식, 문화, 오락, 중국 브랜드 육성, 실버, 육아, 헬스 등 서비스 소비 촉진
 - 중국 내 소비 잠재력을 자극해 내수 확대 +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예정
- **신형 도시화:** 인구 도시화에 맞춰 토지개혁 추진 → 내수 진작 도모
- 부동산 살리기: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부동산 경기 침체 방어
- 산업의 고수준 발전: 전통 제조업 고도화 및 미래 산업의 혁신적 발전 추진
- 대외 개방: 중국 투자 상황 개선,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고수준 대외 개방 입장 견지
 - **개방형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할 것으로 예상
- 투자 유치: 네거티브리스트는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을 전면 철회**
- **수출 규제:** 주요국의 견제 심화에 따라 자국 산업 및 전략적 자원 보호를 내세워 **핵심 광물, 산업에 대한 통제**를 진행해왔으며, 지속 강화할 것
 - ****희토류 관리 조례****를 시행하여 관리 및 통제할 예정
- **수입 규제:** EU, 미국 등 주요국 대상 **반덤핑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실시 → 맞대응 수입 규제 시행

시장 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실버산업, 반려동물 산업, 맘코노미 시장 성장세 뚜렷

- 실버산업: 65세 이상 인구 비중 15.4%, **온라인화 확대**
- 맘코노미: 저출산 심화 속 젊은 부모들의 영유아, 산모 제품 수요 프리미엄화
- 펫코노미: 1인가구 증가 및 핵가족 확산으로 반려산업 성장 지속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이성,엔즈, 귀차오, 웨지 소비가 신 소비 트렌드로 부상

- 이성소비: 합리적 소비 형태 증가(YONO)
- 엔즈, 애국 소비: 외모 중심의 소비활동 경제 소비와 **귀차오(애국) 소비**성향 확대
- 웨지 소비: 웰빙을 중시하는 **자신을 위한 소비** 패턴으로 변경
- 교역: **무역 흑자 기록**

소비 트렌드

- 새로운 소비 주도 세력 세대에 의한 소비 패턴 변화
 - Z세대: 합리적, 가성비 소비 추구, **위예지 소비 주력**, **귀차오** 소비 성향
 - 쉬코노미: 여성이 경제 주체
 - 신중산층: 가성비 + 정서적 가치 중시, 고품력, 온라인 소비
 - **뤄지(자신을 다스리는)소비**
 - 온라인으로 고가 제품 소비에 익숙
 - 신노인: 높은 소비력 바탕으로 고급 소비 추구, 온라인 쇼핑을 즐김
 - 개인 < 가족생활에 필요한 품목 구매 비중 높음
 - 캔디, 간편식품, 면, 쌀, 조미료 등

- 온라인/수입선호/건강관리 소비 트렌드
- 실버족(50세 이상 중노년): **피동적 소비자**
 - 50 - 59세: **위예지(웨이: 자신을 위한)** 소비에 집중, 수입/디지털 제품 수용도 높음
 - 60 - 69세: 브랜드 인지도, 방문 서비스 중시, 일상용품/기능성 제품 선호
 - 70세 이상: **소비주체가 30, 40대 자녀**, 영양제/가정용 의료 기기 선호
- **하침시장**의 잠재력 지속
 - 3선 이하의 도시 및 농촌지역
 - 총면적 90% 차지, 인구 10억명, 지역 평판/단골 확보는 매우 중요(쿠폰 <接客)
 - 모바일 인터넷 의존, 가성비 소비
- **커뮤니티 공동 구매** 급부상

〈중국 주요 소비 계층별(新三代) 新 소비 트렌드〉

Z세대(10~20대)	쉬코노미(여성 경제)	新노인(실버 경제)
1995년부터 2009년 사이 태어난 세대	'밀레니엄 마더' 및 중산층 여성	50~70세 사이 젊고 건강하며 활기찬 노인
- 모방형 소비에서 개인 맞춤형 다양성 및 개성형 소비 추구 - 실업률 증가, 주거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가성비 소비를 추구하지만, 단순 저렴한 상품이 아닌 '합리적' 가성비 추구 - 주택 구입 등 장기적 소비보다 스포츠, 여행, 미용·패션 등 자기만족형 소비를 선호	- 고소득과 라이프스타일 추구로 발전형 소비 주도 - 전자상거래, 뷰티산업, 여행업, 콘텐츠 소비 등에 주요 타깃 - 온라인 커뮤니티형 소비 추구 - 교육 및 취미 분야 투자 선호	- 고령사회 진입으로 문화 및 여행, 취미 기반 소비 및 건강 관리 등 보상형 소비 (養老 → 享老 전환) - 스마트 양로, 건강관리, 노인 분류, 레저 등 '젊은 노인'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확대

자료: KOTRA 중국지역본부 및 청두 무역관 정리(2024년 9월)

〈중국 주요 소비 계층별 트렌드 및 유망품목〉

분류	트렌드	유망품목
Z세대	이성(理性) 소비, 개성 소비, 알뜰 소비	스포츠, 미용, 패션, 게임 등
1인 경제	나를 위한 소비, 기분 전환용 소비	소형 가전제품, 반려동물 용품 등
쉬코노미 여성 경제	발전형 소비, 커뮤니티 공동구매	이너뷰티, 여행, 건강, 다이어트 등
영유아 엔젤 경제	저출산 시대 프리미엄 제품 소비	프리미엄 유아용품, 영유아 영양제 등
新노인 실버 경제	보상 소비	스마트 양로, 건강식품, 레저 등

자료: KOTRA 중국지역본부 정리(2024년 9월)

일본 진출

- 일본: 객 3 주 1
- 키덜트: 어른이 돼서도 어린시절 감성을 추구하는 성인 → 고가 형성
- DX(디지털 전환), GX(친환경 전환)
- **스크루플레이션**: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 체감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가. 시장 전망

GDP 성장률: 24년 0.3 → 25년 1.1% 상승 전망, 1/4분기 성장률: -0.2% (5.16)

- 임금 인상률이 둔화되더라도 실질 임금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개인 소비는 회복 기조를 유지할 전망
 - 실질 가처분 소득 안정으로 개인 소비의 완만한 회복 예상
 -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 억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산소득 증가가 소비를 뒷받침
- 설비 투자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DX & GX)
- 임금 인상과 미 국물 가격 상승은 소비자 물가를 높이는 요인이거나, 엔저 안정화, 원유 가격 하락 영향으로 물가는 2% 목표 하회 전망
 - 25년 후반에는 소비자 물가 1%대 중반 둔화 예측
- **물가상승 =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디플레이션)을 벗어났다는 의미**
 - 디플레이션 → 금리 0% → 벗어남(물가 상승) → 금리 인상 가능성 ↑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이시바 내각 출범, 여소야대 정국 속 국정 장악력 우려

- **여소야대**: 자민당(191석), 공명당(24석) 합계(215석)으로 과반수인 233석 확보 X, 야당은 모두 의석수 증가
- 자민당 정치 자금 문제로 지지율 하락 → 기시다 전 총리의 총재 선거 불출마 선언 → 자민당 신 총재 선거 → 역대 최다인 9명 입후보 → 내각 인선 발표 후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거 실시 →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정국을 맞아 이시바 총리를 재선출

이시바 내각 주요 정책이 일 경제, 사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취임전

- 경제: 통화 정책 정상화, 재정 건전화, 지방 균형 발전(**금리 인상**)
- 외교: 아-태 지역 집단 안보 구축(아시아판 NATO 창설을 통한 지역 안보체제 구축)
- 환경: 재생 에너지 비율 확대(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활용 가능성** 일부 언급)

취임후

- 금리 인상 신중론
 - 완화적 통화정책 언급, 연내 추가 금리 인상 불투명 → **엔화 약세 지속 전망**
- 금리 인상 →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지출 효율화 → 기초 재정 수지 흑자화 → 디플레이션 탈출 제시
- 경제/산업: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 제조업,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고용/투자 촉진
 - 최저임금 평균 1500엔 인상과 남녀 임금 격차 해소
- 아시아판 NATO 창설 유보 입장 선회
 -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 확보 어려움
 - 동아시아 위협인식이나 안보 이해가 상이
- 미국 대선 결과의 향방 및 엔고 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가 금리 인상은 연말로 연기 될 것이라는 전망**

- 실제: 25년 1월 금리 인상(24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2.8%로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
- 0.25(24.12) → 0.5(25.01)

이시바 내각 운영 전망

2차 이시바 내각 전망

- 파벌에 속하지 않은 자민당 소수파인 이시바 총리가 당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문제
- 일본 국민 인식은 여전히 비판적
- **소수여당**이 된 자민당이 예산안과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하는 상황

이시바 내각 주요 정책

- 재정: 통화정책 정상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우선
 -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
 -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 →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 디플레이션 탈출 제시(0.25 → 0.5)
- 경제/산업: DX, GX, 첨단/제조업 기술경쟁력 제고, 지방 균형 발전 강조
 -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혁신, 제조업,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 강화
 - 고용, 투자 촉진을 위한 생산거점 국내 회귀 등 지원을 강조
 - 최저임금 평균 1500엔 인상(현: 1055엔), 남녀임금 격차 해소
- 환경/에너지: 원자력발전 필요성 제시,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급률 확대
- 대외 관계: 한일관계 악화 우려는 낮을 것으로 예상

나. 역대급 엔저와 고물가가 소비에 영향 확대, 대응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

- 달러-엔 환율은 24년 상반기까지 지속적 상승 추세 → 일본 내 물가 상승과 소비 시장 위축에 영향을 끼침
- **슈퍼 엔저**상황 발생(수출유리, 수입 불리 → 에너지, 자원 수입에 불리)
- 트리플 레드가 확실시되자 재정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 → **미 국채 매도 확산**(신용등급 하락, 감세 정책, 경기 둔화 불확실성 ↑) → **미 국채 장기 금리 상승** → 미-일 금리차 확대 예상엔 매도, 달러 매수 → **엔저 심화 분위기 조성**
- 국채 수요 ↓ → 보상 심리로 국채 가격 ↑(10년물 국채 금리 4.5% 넘어섬)
- 국채 가격 ↑ = 미래 성장 기대가 부정적, 위축 될 것이라는 것
- 고물가를 넘는 개인 소득의 확대를 모토로 과감한 경제정책 추진
- **아베노믹스**: 임금 동결
- **현재**: 임금 인상(5% 상승하지만 현재 한국에는 못 미치는 상황)
- 춘투 시즌에 맞춰 기업 대상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촉구**, 경영계도 이에 호응하여 33년만에 최대 임금 인상 실시
- (계획중) 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한 정액 감세 시리, 고물가를 넘는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가계소비 진작을 기대

여전한 절약 지향 소비 추세, 소비심리 개선 기대

- **슈퍼엔저**로 인한 고물가가 임금인상률을 상회해 **실제임금이 실제로는 감소한 체감**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

- 소비자태도지수: 50이 안됨 → 절약
- 소비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세와 실질 소비 지출이 서로 비례해 움직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현상이라는 분석)
- 물가상승 > 월급상승 → 절약

다. 30년만의 기록적인 임금상승률, 인재 확보의 새로운 과제

- 24년 춘계 노사협상(춘투) 최종결과 5.33% 임금 상승 기록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 정부 및 기업은 인재 유치를 위해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단행**
- 일본은 기업별노조 → 대기업은 임금 상승 견인 But 중소기업은 임금 상승 어려움
- 대기업: 철강, 정보통신 분야가 평균 10%를 웃도는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며 높은 **임금 상승**을 견인
- 중소기업: 5%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한 분야는 금융이 유일
- 24년 임금 인상 시행 기업
 - 대기업: 94.1%
 - 중소: 84.2%(전년대비 감소)
- 노동인구 부족으로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장으로 서서히 전환 추세(더 나은 조건을 가진 대기업으로 이직 → 평균 임금 상승 견인)

22년 연속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의 취업 조정으로 인력 부족을 야기할 우려

- 25년 최저임금: 1055엔
- 최저임금 상승 → **연수입의 벽**을 넘어선 근로자들일 추가 취업 조정을 실시할 가능성 ↑ → 인력 부족에 박차를 가할 우려
- **연수입의 벽**: 주민세, 소득세 등의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가 들지 않게 하기 위해 **근로자가 노동시간을 억제하는 취업조정을 실시하는 것**

라. 설비 투자 증가와 국내 생산 거점 강화

여전한 미-중 대립으로 일 국내 생산거점 강화 및 해외기업 일본 진출 확대

- 대규모 반도체 지원 보조금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 국내 공급망 강화 중
- TSMC의 구마모토현 신공장 건설을 계기로 소니, 토요타 및 소재 메이커인 후지필름 등의 구마모토현 공장 및 설비 투자 확대
- But 긍정적이지는 않음
- 일 정부/기업의 국내 중심 공급망 재편은 한국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음

대표 기업(중요)

- **키옥시아**: 옛 토시바메모리(현 SK하이닉스 지분 15%, 자본구조: 한미일 합작투자)
- **라피더스**: 22년 소니, 도요타, 키옥시아, NTT, NEC, 소프트뱅크, 미쓰비시 UFJ은행의 8개 대기업이 출자한 회사

마. 2025년 문제: 고령화와 인력 부족의 심화

의료, 간병 서비스의 DX수요 급증

- 베이비붐세대(단카이, 많음) 고령화 → 인력 부족 문제 심화 → DX(디지털전환) 수요 급증

- 25년부터 60년의 실질 성장률별 시나리오에 따른 GDP 대비 사회보장비 비율을 예측, 고도의료 이용 상황이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 '60년 의료/간병비는 명목 GDP의 13.3%에 도달, 이는 '19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
- 간병업계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만성 인력 부족 상태 + 이직률 높음
- **외국인 노동자의 적극적인 수용** + 일본인 종사자 확보도 노력 중

바. 일본의 GX, 실행 단계로 진입

정부 지원 정책, 투자에 힘입어 일본 GX는 '실행' 단계로 진입

- Green Transformation: 저탄소, 탈탄소 전환(**전 기시다정권 새로운 자본주의**)
- DX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에너지 확보 중요성 강조
- '50년(중국은 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탈탄소가 어려운(철강, 화학)의 대응이 중요, '24년 5월 수소, CCS 도입 관련 법률 마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의 탈탄소 공급망 구축 본격화

- 일본의 전체 사업 수익에서 GX 관련 수익의 비율은 **약 10%, 독일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으로 하이브리드 차, 에너지 효율이 높은 산업용 제품의 수익이 큼

일본의 DX

- 스가 전 총리의 '디지털 개혁'을 계승, 발전, 디지털 사회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하락 및 과제 선진국으로서의 위기의식 고조
- 23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64개국 중 32위(18년 부터 순위 하락, 한국 6위, 중국 19위)
- 24년 디지털 경쟁력 순위 68개국 중 31위(한국 6위)

사. 2025년 절벽 DX 추진 실패 시 일본 경제 위험

1. 유지 보수 비용 증가 & 기업 기밀 유출
 - DX를 통한 새로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존 **노후화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비용이 증가**
2. 표준화된 IT 인력 확보 어려움 및 인재 육성 비용 상승
 - 신규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간 개발 언어 불일치로 노후화된 시스템에 대응하는 **인력부족**에 직면 가능
3. 시스템 고립화로 인한 산업 경쟁력 감소
 - 각 기업 시스템이 고립화되고 일본 기업 간의 기술 교류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과 유기적인 교류가 불가능해짐

대응

- 정부: 국제적 신뢰성 있는 표준화 시스템 구축
- 기업: 데이터 내재화 추진

아. 자동차를 잇는 일본의 2대 수출산업 인바운드 소비

8조엔을 눈앞에 둔 인바운드 소비, 일본 대표 산업으로 성장

- 방일 외국인수 4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 10년만에 5배로 성장하며 일본 경제를 지지하는 존재감을 나타냄
- 인바운드 확대는 코로나로 침체된 **일본 소비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But 내국인 생활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짐
- 서비스업 인력 부족 문제 대두, 정부는 **오버투어리즘** 대책 수립중

숙박, 음식 등 체험형 소비 비율 증가, 일 전국으로 인바운드 효과 확산 노력

- 체험소비(**코토소비**)가 증가: 숙박, 음식, 교통 등 체험형 소비 비율은 늘지만, 단순 쇼핑은 감소
- 코토소비 관심을 활용해 '지방의 고부가가치 관광지'로 인바운드 효과를 일본 전국에 확대하고자 함
- **코토소비**: "모노(물건)"을 소비하기 보다는 "코토(시간)"을 소비하는 것(제품 < 체험)
- **토키소비**: 체험소비 → **코토소비** → 토키소비(공유, 교류, 참여, 공헌)
- 토키소비 특징: 비재현성, 한정성, 참가성, 공헌성

비즈니스 환경 분석

가. 정치환경

이시바 총리로 교체 후 중의원 선거 참패로 여소야대 구도를 맞은 자민당 정권

- 정치자금 스캔들 → 낮은 지지율(기시다 총리) → 총재 선거 불출마(총리직 퇴임)
- 이시바가 총재로 선출
- 중의원 해산 후 총선거 → 465석 중 연립여당 합산 215석 확보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여당 세력 확보(여소야대)

이시바 총리 주요 정책 방향

- 금리인상, 증세
- 지방창생, 출산율 제고, 수도권 집중 해소
- 디플레이션 완전 탈출 목표 → 물가 상승 이상의 임금 인상 달성을 위해 1500엔 달성을 목표로 제시

나. 경제환경

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24년 대비 높은 1.1% 전망, 실질임금 상승세 유지에 따른 개인 소비 회복, 설비 투자 증가세 지속 영향

- 생산: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산업생산지수 하락 → 단기 경기 침체 가능성 상승
- 소비: 임금 인상 및 관광객 증가 → 개인 소비에 긍정적 신호(일본은행: 완만한 증가 기조로 상향 조정)
 - 지속되는 엔저현상 → 물가상승압력 강함 → 개인소비 악화요인으로 지목
- 설비투자: 3년 연속 증가, 디지털(DX), 탈탄소(GX) 관련 투자 지속 예상
- 물가: 인건비 상승분 가격 전가로 인한 서비스 물가 상승,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에 완화가 상쇄되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 환율: 일-미 금리차 감소로 인한 달러약세, 엔화강세 완만한 진행 전망
- 고용: 생산인구 감소 → 기업들 구인난 심화 & 고물가 → 구직자의 이직/겸업 수요는 증가 추세